

모심의 살림의 노 길

이슈진단

표고버섯 방사성물질 검출사태

|한살림운동의 심화와 확장의 계기로 삼자

분야별 동향

농업·먹거리 | 경제·생활 | 사회·환경 | 정치·사회운동

- 목 차 -

이슈 진단

표고버섯 방사능물질 검출 사태, 한살림운동의 심화와 확장의 계기로 삼자	1
---	---

분야별 동향

[농업 · 먹거리]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현상의 심화	7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규모와 시장	7
•도시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8
•농어민 자치기구와 정부의 대행기구 사이에 서 있는 '농어업회의소'	9
•유기농 수출국들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유기농 동등성 제도'	10
•동물복지를 적용한 축산의 단계적 확대 실시	11
•대만의 反 락토파민 시위와 육류 안전성 논란	12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우선 사용 가능	13
•방사능오염에 위협받고 있는 먹거리 안전 문제	13
•일본보다도 느슨한 우리나라 정부의 방사능 기준치	14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농업 피해 현황	15
•현대 과학기술로는 제거가 쉽지 않은 방사성오염 물질들	16

[경제 · 생활]

•한-중FTA 협상의 공식적 개시에 따른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18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9
•지속가능한 생활과 미래를 위협하는 가계 부채 문제	20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입제한 조치 확대와 갈등의 확산	21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의 등장과 현황	22

[사회 · 환경]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귀농에 대한 높아진 관심	24
•국제 식품가격 상승과 식량낭비 속에 방치되는 굶주리는 아이들	2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대 규모 국제회의 '리우+20 회의'의 준비 동향	25

[정치 · 사회운동]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풀뿌리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	28
---	----

살림의 말

그해 6월의 석발기와 한국 사회운동	29
---------------------------	----

이슈 진단

표고버섯 방사성물질 검출 사태, 한살림운동의 심화와 확장의 계기로 삼자

농촌과 도시,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넘어 협동과 공생의 길을 열어 온 한살림은 '방사능오염'이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서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둔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방사능오염 문제에 대해 한살림이 앞서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이어온 것 자체로도 의미 있고 귀한 일이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의 성격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은 만큼, 신속하게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살림이 세상에 발을 내딛으면서 내걸었던 핵심 가치와 지금까지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해 온 한살림운동의 목표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표고버섯 방사성물질 검출 문제를 다뤄나감에 있어 한살림 차원에서 기본 원칙을 단단히 세우고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첫째, 한살림은 방사능오염물질의 위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둘째,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한살림의 노력과 조치들을 조합원들에게 신속, 투명하게 안내하여 조합원들이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먹을거리 안전성은 물론 식량자급도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사능오염 문제도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

넷째, 방사능오염에 따른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와 탈핵 사회를 향한 한살림의 실천 노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하는 탈핵 실천 활동을 통해 생명살림 세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간다.

- 작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면서 전 세계가 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살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생협조직이자 생명살림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 한살림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오염 문제가 제기되자 국내 생협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방사능오염에 따른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 또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전 회원조직이 각종 강연회와 교육 및 소식지 등을 통해 방사능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조합원과 공유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왔다.
- 그 결과 전 회원조직이 2012년 총회를 통해 '핵 없는 사회'를 향한 활동을 주요 실천 과제로 채택하였고, 후쿠시마 사태 1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탈핵 사회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에 조합원과 함께했으며, 탈핵 사회를 위한 시민실천단 모집과 함께 연중 실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 한편,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주요 취급 물품들을 선정해 국가지정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통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해 왔다.
- 그러던 중 한살림에서 취급해오던 표고버섯에서 지난 3월 29일 처음으로 방사성물질 세슘137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그 양이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치의 1/100 이하 수준이지만, 한살림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당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후 이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린 바 있으며, 그동안 긴급대책회의, 전문가가 참여한 긴급정책간담회, 임시 이사회, 정기 이사회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 이처럼 한살림은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조직 내부의 부담과 갈등으로 작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조합원들과 함께 탈핵 사회를 향한 실천을 선언하고 먹을거리의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해 온 한살림으로서는 이번 표고버섯의 방사성물질 검출 사태가 주는 충격과 부담이 몹시 큰 것이 현실이다.
- 방사성물질의 생성 책임이 해당 생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이 검출된 물품의 생산자들은 공급 중단 조치가 지속되면서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다.
- 그렇다고 '방사능오염에 있어서는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합원 교육을 통해 공유해 온 터에 비록 미량이나마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물품을 조합원에게 바로 공급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소비자 조합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생산자의 마음과 생산자의 생활을 걱정하

는 소비자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한집살림' 하듯 생명살림의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 온 한살림이기에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이번 방사성물질의 검출 사태에 따른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관료주의와 비밀주의에 갇혀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사태를 악화시켜버린 일본 사회에서 근래에 **'방사능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성찰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한살림은 이번 방사능오염 사태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산자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 조직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방사능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한살림이 그동안 노력하고 고민해 온 과정과 내용들을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지혜를 구하고, 올바른 평가를 통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화 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번 방사능오염 사태는 생산자나 소비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살림만의 문제일 수도 없는 만큼,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자 문명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방사성오염 물질은 그 확산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농약이나 중금속 등과는 차원이 달라서 사전 예방적인 노력 없이는 생산자나 소비자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그 위험성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 이번 한살림 표고버섯의 방사성물질 검출을 계기로 타 단체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표고버섯을 살펴본 결과, 해당 물질의 오염으로부터 어느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 오염의 원인은 명확치 않으나 지표식물인 표고버섯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 세슘137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토양에서 미량이나마 검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정부기관의 조사 자료를 통해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다.
- 26년 전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그동안 2천여 회가 넘는 핵실험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더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사고가 난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채 지금도 방사성물질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치 아래라는 이유로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 수산물들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방사능오염 문제가 앞으로 먹을거리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핵발전소를 수출효자 품목으로 삼아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 협박을 일삼고 있다.

- 핵과 방사능 속에는 현대문명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위험이 가장 노골적으로 응축되어 있다. 성장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 온 지금의 사회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양식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핵과 방사능 문제를 이번 기회에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일찍이 한살림선언에서는 현대 산업문명의 위기적 증후 가운데 첫 번째로 '핵위협과 공포'를 들었으며, 올해로 26주년을 맞은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났던 바로 그해 '한살림농산'이라는 작은 쌀가게를 통해 생명살림 운동의 첫발을 내딛은 바 있다.
- 그런데 이제 한살림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그동안 강조해 온 책임생산과 책임소비로 소비자의 생명과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다.

- 탈핵 사회를 향한 실천을 조합원과 사회에 약속한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은 물론이고 이웃과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지키고 살려나가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실천들을 해나가야 한다.

-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지만 오히려 울진과 고리 등에서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왔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원전 시설에 대한 납품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고리원전 사고시 엄청난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가 나와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 여기에서 정부는 전력 수요 폭증으로 여름철 '전력 대란'을 예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전기료 인상과 절전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핵과 방사능오염과 관련해서 당혹스럽고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의 '절대 안전' 신화가 여지없이 붕괴되었듯이, 이번 표고버섯 방사능오염 사태를 통해 '방사능오염 제로 사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무너졌다.
-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모든 측면에서 방사능오염문제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먼저 변화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바꿔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방사능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도 결국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와 노

력 위에서 가능하다.

- 따라서 한살림은 핵과 방사능오염 문제에 대해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방사능오염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해나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 '서로 살림', '더불어 살림'의 생명운동을 지향해 온 한살림은 방사능오염 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있어서 책임과 부담을 함께 안고 나누고 넘어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 한살림운동에 있어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나누는 활동과 조합원과 함께 하는 사회실천 활동이 별개일 수 없듯이, 방사능오염 문제와 관련한 한살림 차원의 물품 취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한살림이 선언한 탈핵 사회를 향한 실천 활동 역시 함께 가야 할 문제다.
- 관련해서 방사능오염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뤄나가기 위해서는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는 물품 취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준치는 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합의의 결과물로서, 목적과 상황, 조건에 따라 변화 가능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현재 각 국가와 단체들이 서로 다르게 방사능오염 관리 기준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중요한 것은 방사능오염에 대한 안전성 기준치를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사회구성원들이 져야할 책임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방사능오염이 가진 특성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기준치 설정에서도 필요하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느슨해졌던 정부 기준치를 4배 이상 강화시켜 지금 우리 정부의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만들어 낸 것도 시민들의 자각된 힘과 노력 때문이다.
- 일본 생활클럽생협의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생활클럽생협은 당시 정부의 방사능오염 기준치 보다 10배 강화된 자체 기준치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작년에 자국 내에서 방사능오염 사태가 발생하자 논란 끝에 자체 기준을 내려놓고 훨씬 완화 된 정부 기준치를 따랐다. 그 배경에는 일본 국토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상황에서 기존의 기준치로는 국내 생산물로 원활한 식량 공급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상황이 어렵다고 생산자와 함께 해 온 상호협력 관계를 외면하는 것은 생활클럽생협이 취해 온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인식들이 있었다. 이후 방사능오염에 대한 정부 기준치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지금은 훨씬 강화된 자체 기준치를 마련하였다.
- 한살림은 방사능오염에 대한 기준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하는 '운

동적 과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같은 기준치 결과라도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

- 현재 한살림이 정부 기준치의 1/10을 잠정기준치로 정한 데는 방사능오염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가져가기 위한 운동적 목표도 담겨 있다. 한살림 자체 기준치를 아무리 엄격하게 가져가더라도 조합원들이 한살림 물품으로만 밥상을 차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다, 일반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생명살림운동을 하는 한살림의 책임 있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 방사능오염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원전 확대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와 원전을 운영, 관리하는 해당 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있다. 물론 생활인들의 눈높이로 불편한 진실을 꿰뚫어보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실천 과제들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이제 안전성 기준을 둘러싼 논의의 틀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한살림이 마련하고자 하는 방사능오염에 대한 자체 기준치는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없는 생명평화 세상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분야별 동향 1

농업 · 먹거리

●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현상의 심화

-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만 명 더 늘어난 반면, 농가 인구는 약 100만 명 줄어들어, 2011년에는 처음으로 농가 인구가 3백만 명 이하인 296만 5천명으로 나타남.
- 지난 50년 동안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여, 1970년에 45.8% 수준이던 것이 1980년 28.9%, 1990년 15.3%, 2000년 8.7%, 2010년 6.3%에서 2011년에는 5.9%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옴.
-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도시 인구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농가 소득과 경지 면적의 양극화도 점점 확대되고 있음.
- 농가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율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1.4%의 3배 수준인 33.7%로 나타났으며, 10년 후에는 4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2011년의 농가별 판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2만 8천 가구(2.4%)인 반면, 3천만 원 이하인 농가는 99만 8천 가구(85.8%)로 나타남.
- 농가 가구당 경지 면적을 보면, 0.5ha 미만 농가(47만 8천 가구)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반면, 5.0ha 이상 농가(4만 1천 가구)는 4.5% 증가.

●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규모와 시장

-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유기·무농약·저농약)의 생산 규모와 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 친환경 농산물 인증실적은 연평균 43.1%로 증가하여, 2000년 2,448농가에 3만 5,406톤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16만628농가, 181만9,228톤으로 늘어남.
-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2000년 6,538톤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무농약 농산물은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에는 조금 줄어들었고, 저농약 농산물도 2008년을 최고로 하여 이후 하락세를 보임.
-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의 신규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유기 및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 노력이 필요. 특히 저농약 비중이 높은 과수농가의 유기재배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친환경 농산물의 전체 인증면적도 연평균 122.7%로 증가해 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절반(50.9%)은 전남이 차지.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 2011년 기준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3조2,602억 원으로, 이중 유기농은 5,364억 원(16.5%), 무농약이 1조5,627억 원(47.9%), 저농약은 1조1,611억 원(35.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에 유통되는 친환경 농산물 종류를 보면 곡류가 31.7%, 채소류는 28.7%, 과일류 21.9%, 서류 4.3%, 특작·기타가 13.4% 비율로 차지하고 있음.

- 경제 상황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는 2012년 3조6,800억 원에서 2013년 3조9,845억 원, 2015년 4조8,329억 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0년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시장 거래액의 약 20%(6조9,000억 원)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도시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식량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도시농업은 도시의 기후조절과 대기정화, 토양과 생물다양성 보전, 식량자급기반 확대와 여가 활동 지원, 농업과 생태계에 대한 도시민들의 감수성 향상과 치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전국귀농운동본부는 2008년부터 도시농업위원회를 통해 수도권지역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자텃밭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있음.

- 정부(농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올해 5월부터 시행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올 8월까지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임.

-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정 기관도 운영 할 계획임.

- 도시농업 확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음.

- 작년 한 해 동안 21개 지자체들이 도시농업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도 서울, 부산, 원주 등 40여 개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임.
- 서울시는 2014년까지 도시농업공원 4개소(노들섬, 갈현동, 불광동, 관악구 삼성산 등)를 시범조성하고 자치구별로 1개소씩 확충하며, 텃밭형 농장 총 354개소, 옥상농원 110개소의 설치도 지원하여 도시농업 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도시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사 가능 지역 확보(규모, 교통 및 위생조건 등)와 농자재 개선 및 보급, 컨설팅 지원단 육성 등의 지원 노력도 필요함.

● 농어민 자치기구와 정부의 대행기구 사이에 서 있는 '농어업회의소'

- 현재 정부는 법을 제정하여 농업과 농업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국가간 협상, 예산 결정 등을 농어업회의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 한미FTA 발효와 한중FTA 협상추진 등 농어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민들의 자율적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임.
- 농어업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대의기구로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정부나 자치단체에 건의하는 등 농정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농어업회의소에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기초단위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시범 운영한 후 그 성과를 토대로 광역과 중앙단위에까지 농어업회의소를 확대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2010년 1차년도에 진안군, 나주시, 평창군이, 2011년 2차년도에는 전북 고창, 경북 봉화, 경남 거창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임.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농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타협의 결과로 농업회의소를 통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자국 농어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해 옴.
- 독일 경우 농업회의소가 자국 농업을 지키는 데 앞장서 쿼터제(경작허가제) 등을 통한 생산량조절, 농자금, 농지,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 농어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결정과 예산 배정, 국가간 협상

등에 농어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다만 농민회 등 이미 다양한 형태의 농민자치조직들이 있는데 농어업회의소만이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 추진 방식도 정부가 나서서 주도할 경우 결국 농민 자치 조직으로서 기능은 약화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농민관련 단체들 내에서도 농어업회의소를 적극 활용하자는 입장과 FTA 추진 등 농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현재 공존하고 있음.

● 유기농 수출국들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유기농 동등성 제도’

-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가 간 교역 확대로 유기농 식품의 안전성과 교역 기준이 국제사회에 주요 현안으로 등장함.
- 유기농 식품시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기농 경작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도 산동성과 동북 3성 지역을 중심으로 녹색식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유기농 재배 지역이 100만ha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유기농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유기농 시장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12년 2월 15일 상대국의 유기농 인증제도를 자국과 똑같이 인정하는 ‘유기농 동등성 협약’(Organic Equivalence Arrangement)을 체결함.
- 미국과 EU의 유기농 산업 규모를 합하면 우리 돈으로 약 60조 수준으로, 이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각국의 절차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식품을 상대국의 유기농 인증절차 없이 ‘유기농’(organic) 표기를 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됨.
- 이번 협약은 미국과 EU 내에서 생산·가공·포장된 유기농 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양국은 동물복지, GMO 오염방지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
- 유기농 인증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 미국-EU의 사례를 포함해 미국-캐나다, 캐나다-EU가 있으며, 이들 모두 유기농 수출국이라는 점이 특징임.

- 유기농 수출 강국들의 유기농 동등성 제도의 도입은 수입국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기농 인증에 대해서도 동등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농촌경제연구원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수입원료 및 수입완제품이 86.3%(1,862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 중에서는 미국산이 2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농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 동등성 제도의 도입으로 유기농식품의 수입 인증이 간소화되어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과 교역 구조를 고려할 때 유기농 수출국들과 동등할 수 없는 만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결국 교역 조건의 개선에 앞서 국내 친환경농업의 보호 및 육성 노력과 유기농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동물복지를 적용한 축산의 단계적 확대 실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이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들의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관심들 높아지고 있음.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농장동물(가축)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국들에게 기준 준수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축산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동물복지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해 실천해 오고 있음.
- 영국은 1994년부터 동물보호협회를 통해 가축의 사육에서 수송,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동물복지 취급기준을 마련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1999년부터 가축운송과 도축과정에서 전기충격 등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는 방사형으로 사육된 닭과 계란에 대해 동물복지형 축산물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도 2000년부터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할 경우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 EU는 2013년부터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을 시행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과 돼지 모돈의 스톨(사육틀) 사육 등을 금지키로 함.
- 동물복지 기준은 수출국들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수입국들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실제로 EU는 2007년 9월 한EU 3차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양계와 도축 과정에 대해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2월 5일부터 우선 산란계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2013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산란계 사육시설에 햇빛을 제공하고 120마리당 1m²이상의 산란 장소를 제공하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한 곳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부여할 계획임.
- 동물복지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생산농가들은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들을 마련하는 데 비용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그만큼 일반 축산물에 비해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함.

● 대만의 락토파민 시위와 육류 안전성 논란

- 올해 3월 초 대만의 마잉주 총리가 락토파민이 잔류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단체와 야당으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락토파민이 검출된 수입 소고기를 전량 폐기함.
- 락토파민은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는 미국 엘란코(elanco)에서 판매하는 동물 흥분제의 일종으로, 지방을 줄이고 살코기를 늘리는 등 육질 개선에 이용되는 사료 첨가제임.
- 락토파민은 1999년 미국 식약청(FDA)이 승인한 이후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 20여 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0.01ppm(소 지방 기준)수준에서 잔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서울대 수의대 이문한 교수는 락토파민이 잔류한 육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호흡이 빨라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신장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 이처럼 락토파민은 안정성을 문제로 EU에서는 1996년부터, 중국에서는 2002년부터 사용을 금지했고, 대만은 식품당국이 2007년 락토파민이 검출된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다가 양돈업자와 시민들의 거센 요구로 반입을 금지하는 등 전 세계 150개 국에서 락토파민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각종 식품안전 사건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왔고, 최근에는 광우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음.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락토파민으로 인한 육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우선 사용 가능

-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부 조달 형태의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됨.
- WTO 정부조달협정은 자유국제무역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4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음.
- 협정 가입국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대해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다른 회원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정부조달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수입산 농수산물보다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대할 수 없었음.
- 우리나라는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을 목적으로 이 협정에 1994년에 가입했으며, 1997년부터 발효됨.
- 하지만 작년 12월 15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되었고, 올해 3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문안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됨.
-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조달의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산 농수산물을 우대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수입농산물의 사용을 완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짐.
- 학교급식 영역이 급속히 성장해 온 현실에서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국내산 농산물 취급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 1997년 58.4%에 불과하던 학교급식률이 2010년에 99.9%로 크게 증가하여, 약 1만1천여 개 학교에서 7백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음.
- 2006년 대형 학교급식사고 이후 대부분 직영체제로 전환(직영 94.6%, 위탁 5.4%)
- 학교급식 실행 주체는 학교장이고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나 우수농산물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통해 지원이 가능함. 자치단체들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통해 친환경(우수)농산물 식재료를 지원의 대상 및 범위로 제시할 수 있음.

● 방사능오염에 위협받고 있는 먹거리 안전 문제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이후 이곳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총 190차례에 걸쳐 111.5톤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

- 품목별 수입 현황을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섞여있는 혼합제제가 32차례 44.2톤, 수산물가공품은 58차례에 걸쳐 42.7톤이 수입됨.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청주는 지난해 3월 이후 61차례 14.5톤 수입되었고, 기타 캔디류(3톤), 조미 건어포류(2.2톤), 양념젓갈(1.4톤) 등도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됐더라도 국내에 유통되기 전 검사단계에서 충분히 방사능 오염 여부를 거르기 때문에 국내에는 안전한 식품만 유통된다고 주장.
-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수입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식약청이 일본 식품의 수입제한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먼저 출하를 중단한 후에 나온 후속조치라는 것임.
- 수입 단계에서 일부 샘플을 채취해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로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본산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에는 수입 지역까지 표기되지 않고 있어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식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섭취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보다도 느슨한 우리나라 정부의 방사능 기준치

-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식품 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을 통해 강화시켰다고 밝힘.
- 작년 3.1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방사성 물질에 대한 잠정규제치를 설정해 관리해 오던 일본은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 내 방사성 물질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치를 새롭게 설정하게 됨.
- 기존 잠정기준치와 신규기준치를 비교해 보면, 우유·유제품은 200에서 50Bq/kg로, 음료수는 200에서 10Bq/kg, 청과류, 곡류, 육류, 계란, 어패류, 해조류는 500에서 100Bq/kg로 강화하고, 유아용식품은 50Bq/kg을 기준으로 새로 설정함.
- 개정안에는 중점검사가 필요한 지자체를 2개 군으로 분류해 명시하고, 대상 식품

도 새롭게 분류하여 구체적인 대상 품목을 결정함. 새로운 기준치는 올 4월부터 적용되나, 쌀 · 쇠고기 · 대두(大豆) 3가지는 성장기간에 따른 공급문제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둠. 쌀과 쇠고기는 10월부터, 대두(大豆)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함.

- 우리 정부의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기준치는 품목의 종류와 성인과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하게 370Bq/kg으로 설정하고 있어, 올 4월 이후부터는 핵발전소 사고가 난 일본보다 더 느슨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식품의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 기준치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식품 특성별로 기준치를 세분화하고, 유아용식품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강화된 기준치를 별도로 만들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식품에 대한 검사 체제가 부실하면 기준치를 강화해도 효력이 없는 만큼,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측정망을 확대하고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지할 필요가 있음.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농업 피해 현황

-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을 맞은 동북부지역 피해 농업지대는 농지의 염분 축적과 방사성물질 누출로 영농활동 금지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음.
- 일본 동북부지역(미야기현,후쿠시마현,이와테현 등)은 강진과 쓰나미로 1만9천명의 인명피해와 2조3,410억 엔의 농림수산 피해가 발생함.
- 후쿠시마현 원전사고 경계지역(반경 20km이내)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더 떨어진 곳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영농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농림수산성은 3년 후에도 피해농지의 영농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 2011년 말 기준으로 쓰나미에 의한 염분 피해농지의 19% 정도만 복구되었고, 2014년이 되어야 나머지가 복구될 것으로 전망.
- 농지에 대한 직접 피해 못지않게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농업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보부족과 불신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피해지역 농수산물의 소비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
- 피해지역 농산물 가격이 타 지역농산물보다 20% 정도 하락되었고 이마저 소비

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농산물 수출도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경우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전년에 비해 4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지의 염분축적 피해와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태양열을 이용한 '식물공장'이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함.

● 현대 과학기술로는 제거가 쉽지 않은 방사성오염 물질들

-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 국토의 약 3%인 11,600km² 지역을 제염(방사능오염제거) 대상지역으로 발표함. 이는 우리나라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임.
- 일본 정부는 '방사성물질 오염대책조치법'에 근거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염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동의 획득과 중간처분장의 확보 문제로 작업이 지체되어, 4월부터 본격적인 제염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당초 제염작업 실시 기준을 연간 피폭선량 5mSv 이상 해당지역으로 했으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1mSv 이상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으며, 대상면적도 대폭 확대함.
- 하지만 지역산업(농업 및 관광업 등)에의 악영향(소문 피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역지정을 거부한 지자체들도 나타남.
- 또한 피난구역이 아니지만 피난구역에 못지않은 고농도 방사선량이 발견되는 장소 일명 Hot-spot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기존의 '경계구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을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거주제한구역', '귀환곤란구역' 등 3구역으로 재편함. 이 중 연간 피폭선량이 50mSv의 귀환곤란 구역은 지금 기술력의 한계와 막대한 비용으로 제염작업이 어려워 최소 20년 이상 또는 영구히 귀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의 제염작업으로 오염된 토양 및 낙엽 등을 제거하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아스팔트 도로나 일반주택 지붕에 실시한 고압수 세척 작업은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기와, 콘크리트 등 미세한 틈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됨.
- 산림지역의 제염도 포기한 상태로, 비바람에 의해 이곳 방사성 물질이 생활환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나 자연적으로 방사능이 감소되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원전 내부 방사성 오염수의 유출과 육지 방사성물질이 개울 및 강으로 계속 유

입되어 방사성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문제도 심각함. 오염된 수산물의 먹이사슬을 통한 내부피폭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거한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의 확보 문제임. 일본정부는 귀환곤란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중간저장시설을 만들려고 하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음.
- 사고원전 부지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폭발 잔해물 등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최종처분장에서 보관해야 하나 이 역시 처리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분야별 동향 2

경제 · 생활

● 한·중FTA 협상의 공식적 개시에 따른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 2005년 한중 양국 간 민간공동연구를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던 한·중FTA는 올해 1월 한중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하는 단계를 거쳐, 지난 5월 2일부터 공식 협상을 개시하는 상황에 이름.
- FTA 추진을 통해 농산물 무역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려는 중국과 가공품을 수출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음.
- 여기에다 한·중 양국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한·미 FTA 타결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중국, 북한과의 협상 지위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도 한·중FTA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4월 19대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는 제1당을 차지함으로써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한·중 FTA 개시와 관련한 내용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농업이 가진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 FTA가 체결될 경우 여타 국가들과의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생산국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농업생산액은 우리나라의 약 27배,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약 34배 수준임. 또한 광활한 농지 면적에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특히 인건비가 낮아서 우리나라 농업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그동안 한·중간 농산물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곡물과 가공원료를 수입해옴. 농수산물 최대 수입 품목인 쌀은 그동안 수입량이 계속 증가해 2010년에는 1억4천4백만 달러에 이름.
- 결국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을 대체하는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채소생산 농가의 피해가 클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과수와 축산 농가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기존의 한·EU FTA나 한·미FTA 등은 그 피해가 축산물과 일부 과실류에 집중되지

만, 한·중FTA 경우는 우리나라 농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먹거리 안전과 식량자급, 생태계 보존 등 농업이 지닌 다면적 기능을 고려할 때, 무역에 기반한 개방형 경제로 치닫는 정부 정책으로부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적인 준비와 대응 노력이 필요함.
- 한·중 FTA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집중 피해가 발생하는 농업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선행되는 조건에서 낮은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농업 문제에 대해 해당 농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농업정책 역시 구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

●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중국 정부는 지난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중심의 안정 성장과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함.
-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30년 간 정부 투자와 저임금에 의존한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에 오름.
-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1년 24.2%로 급증했음.
- 그런데 중국이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8%에서 7.5%로 낮춰 제시함. 여기에는 도농, 계층, 지역 간 격차의 확대로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진 내부적 요인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감소하는 외부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수출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와 분배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은 임금상승과 위안화 절상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하락을 불러와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 원자재와 자본재 비중이 높고 소비재 비중이 낮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증가세 둔화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 둔화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지속가능한 생활과 미래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문제

-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지속가능한 생활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
- 2011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12.9조 원(가계신용 기준)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 213조원에 비해 12년 동안 700조 원 가량 늘어남.
- 1999년 말에서 2011년 말 동안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해 명목 경제성장률 7.1%를 크게 상회함.
- 2010년 말 경제규모(경상GDP) 대비 가계부채(개인금융부채 기준)는 OECD 평균 (79.3%)보다 높은 85% 수준임.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그 구조와 성격 면에서 생활경제를 부실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음.
-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가족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로 부채에 대한 지급능력이 떨어졌을 때', '금리변동 등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계의 지급능력을 초과할 때', '대출로 매입하거나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급락했을 때'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내용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나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 부실화 될 위험성이 큼.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은행(예금은행)이 취급한 주택관련 대출의 형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가계대출을 자산으로 가진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위협할 전망이다.
- 대출구조 면에서는 변동금리 대출과 단기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임.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90.7%이고, 선진국에 비해 금리변동 주기도 짧아 변화에 매우 민감한 구조임.
- 최근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성격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2010년 이후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가계 경제의 부실화에는 높은 부동산 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열악한 고용구조, 높은 사교육비 등도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가계 경제의 부실화가 지속될 경우 식생활 패턴과 유기농산물 소비 구조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음.

●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 확대와 갈등의 확산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급속한 확장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형마트가 우리나라에 처음 개점된 것은 1993년이며,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할인점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은 1996년임. 이후 대형마트는 급속히 성장하여, 1999년 115개였던 점포수가 2011년 말 446개로 증가함.
- 하지만 2003년부터 매출액과 점포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유통대기업들은 SSM 사업으로 진출을 적극 모색함. 상위 3사의 출점 경쟁으로 SSM 점포수는 2007년 343개에서 2009년 640개, 2011년에는 1,045개로 급속히 늘어남.
- 한편, 작년 말 기준 자영업 종사자가 662만9천명인데, 대부분 영세하고 경쟁력이 약한 생계형 자영업자들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SSM의 침투는 지역 영세상인들을 폐업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함.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단서조항을 마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2012년 2월 7일 전국 최초로 전주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에서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함.
-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과 저항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올해 2월 17일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조치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함.
- 대형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권과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유통업체들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

민주화 관련 규정과 제123조 제3항의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규정을 들어 영업 규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의 등장과 현황

- 경기침체와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대안적 경제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공유경제'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의미함.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임.
- 공유경제는 IT기술의 발전과 접목한 새로운 사업 시스템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시작됨. 생산설비를 공유하는 '테크샵'(Techshop), 놓고 있는 사무실을 공유하는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plugandplay techcenter), 자동차를 공유하는 '짚카'(ZipCar), '겟어라운드'(Getaround), '릴레이라이즈'(RelayRides), 여행객에게 숙소와 소파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 '카우치서핑'(Couch surfing), 심부름 도와주는 사람을 알선하는 '태스크래빗'(Taskrabbit), 아기옷 중고장터 '플럼기어'(Plumgear), 지역시장을 만드는 '에그카르텔'(Eggcartel) 같은 기업들이 공유경제의 사례로 꼽히고 있음.
- 최근 GM사는 1300만 달러를 '릴레이라이즈'에 투자하고 나섰으며, 미국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A)도 170억 달러를 지원해 차량공유와 관련한 연구를 시작함.
- 국내에서는 '짚카'와 같은 방식을 채용한 '쏘카'/(SoCar)가 작년 12월 제주도에 도입되었고, '에어비앤비'도 국내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카우치 서핑' 이용자도 조금씩 눈에 띄고 있음.
- 이 외에 '품앗이 파워'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육아 품앗이를 알선하고 도와주며, 미국의 아기 옷 중고장터와 유사한 사회적기업 '키플', 책을 공유하는 '국민도서관', 숙식 공간을 공유하는 '빈집'과 빈집의 차를 공유하는 '빈수레' 등이 있음.
- 또한 'CO-UP'이라는 곳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획들이 창업 아이템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판매'한다는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젊은층의 새로운 창업 트렌드로 제시되고 있으며, 경기 불황과 더불어 인기를 얻고 있음.
- 공유경제 사업은 기존의 렌탈 사업이나 온라인장터와도 유사하지만, 차별성을 갖

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공유경제는 일반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의 장'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참여의 중심임. 여기에 스마트폰 앱과 페이스북, SNS서비스 등의 기술이 더해져서 이용층을 확대하고, 사업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음.
- 소비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데 이를 '공유재'라는 개념에 접목하고 있음. 상품의 내용이 단순한 재화를 넘어서 '공간'과 '서비스'로 확장되며, 주된 거래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신뢰에 기반하여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임.
-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Will Marshall과 같은 사람은 "Labor and the Producer Society"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산자 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함. 기존의 부채를 바탕으로 하는 대량 생산과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절약과 공유,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주장함.
- 공유경제 개념은 최근에 제시되었지만, 이런 내용은 1980년대에도 있었음. 일본의 대표생협인 코프 고베는 1983년부터 조합원 간의 돌봄 서비스를 교환하는 '코프 생활상호부조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조합원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당사자 문제로 고민하던 조합원들에서 시작되어, 2000년 기준으로 일본 생협의 생활상호부조회 회원수는 4만2천명에 이르렀고, 이후 생협 복지 프로그램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아 음.
- 공유경제가 시장과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는 가운데, 이와는 조금 다른 공유경제(Economy of Communion) 개념도 있음.
- 이탈리아인 끼아라 루빅에 의해 1991년부터 시작된 '포콜라레 운동'은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며 재화의 공유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
- 기업들의 경우 수익의 1/3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1/3은 포콜라레 회원 훈련에 기부하고 있음. 주로 브라질과 필리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200개국에서 600만 명이 '합리적 소비자'가 아닌 '나누고 주기 위한 존재로서' 포콜라레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천 개 가까운 기업이 포콜라레 정신에 따라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 운동인 '공유경제'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대전의 성심당을 비롯한 10~15개 중소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경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익의 일부를 국내외의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음.

분야별 동향 3

사회 · 환경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귀농에 대한 높아진 관심

-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연령에 들어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란 6.25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시작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일컬으며, 이들이 2010년 은퇴연령(55세)에 접어들면서 향후 대규모 은퇴인구가 사회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은행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 인구는 712만5천명(2010년)으로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주로 도시(83%)에 거주하고, 가구당 평균 자산총액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확인됨.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2, 3년 사이에 귀농·귀촌 가구 크게 증가하여, 2000년 1,154가구에서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6,500가구로 나타남.
- 2011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의 66.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바라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세우는 가구도 13.9%에 달해 향후 귀농·귀촌 인구의 큰 증가가 예상됨.
- 우리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5년가량 일찍 시작된 일본의 경우 2009년 신규 귀농 인구의 50.3%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남.
- 이런 흐름이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귀농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함. 농지신탁 외에 생협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농지를 마련하고 공유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국제 식품가격 상승과 식량낭비 속에 방치되는 굶주리는 아이들

- 작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던 식품가격이 2002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곡물 생산량 증가 속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함.
- 식품가격의 상승에는 기후변화와 유가상승, 바이오작물 생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2011년 FAO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불안정에 경제 위기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가격의 상승에는 비효율적인 식량공급체계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작년 5월 FAO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1/3이 폐기되는 것으로 확인됨.
- 식품가격의 상승은 경제적 약자 계층, 특히 어린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식량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확충과 생활양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통계적으로 저소득가구일수록 가계 지출 중 먹거리에 대한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아 식품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게 제3세계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게 됨.
-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쇼핑과 외식산업에 따른 음식쓰레기로 연간 6억 3천만 톤의 식량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농작물 수확기술 부족과 냉장시설 및 운송수단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연간 6억 7천만 톤의 식량 손실이 발생함.
- 매년 아동 260만 명이 사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영양실조로 전체 아동 사망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임. 매시간 전 세계 300명의 아동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음.
- 전 세계 아동 4명 중 1명, 저개발국가의 경우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인해 발달지체를 겪고 있음. 영양실조는 아동의 신체와 두뇌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함. 북한의 경우 이로 인한 세대 단절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함.
- 지금 추세로는 향후 15년간 아동 4억 5천만 명이 발달지체를 겪을 전망이다. 발달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으로 매년 0.6%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매우 더딘 실정임. 국제아동구호개발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09년부터 5세미만 영유아 살리기 위한 Hi5 캠페인을 전개 중임.(www.sc.or.kr)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대 규모 국제회의 '리우+20 회의'의 준비 동향

-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일명 '리우')에서 처음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이 대안적 모델로 채택된 이후 20년을 맞아 '리우+20 회의'가 오는 6월 13일~22일(각국 정상 회의는 20일~22일)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번 리우+20 회의에서는 녹색 경제,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물 부족, 도시화, 해양오염, 고용창출, 자연재해 대처 등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들을 다루고 해법을 찾을 예정임.

- 지금까지 세계 183개국이 이번 회의에 참석 의사를 밝혔고, 135명의 대통령과 부통령, 총리들을 포함해 연인원 5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임.
- 이번 회의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9개의 주요 의사결정그룹으로 지목된 여성, 청소년, 장애인, 시민단체, 지방정부, 노동자, 기업, 과학자, 농민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그룹회의를 열 예정이며,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이들 그룹별 준비회의를 해 옴.
- 회의 기간 중 UN이 주도하는 공식행사와 별개로 NGO 포럼이 열릴 예정임. 남미 NGO 및 비아 캠페시나를 중심으로 기후정의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고, People's Summit(사회와 환경정의를 위한 리우+20) 민중총회에서는 생명의 상품화 반대와 공유재 보호를 주제로 하는 포럼을 열 예정임.
-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녹색성장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화를 위한 서명식을 여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녹색경제'를 적극 알려낼 것으로 알려짐.
-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작년 말에 준비 논의를 하고 올해 3월에야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를 발족해 주요 이슈인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를 검토해 입장을 다듬고 있는 중임.
- 하지만 20년 전의 '리우회의'(UNCED)와 10년 전의 '지속가능발전정상회'(WSSD)의 때와 비교해 보면, 이번 '리우+20 회의'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준비 정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 이는 현 정부에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전략에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틀이 부정되었고 정부와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관계도 단절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한편,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지난 20년간의 경험들을 놓고 볼 때 이번 리우+20 회의의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와 갈등들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고, 경험적으로 국제회의에서의 합의가 외교적 수사 이상의 실천적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것임.
- 게다가 지속가능발전에 주요 책임을 가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그리고 대선을 앞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불참의사를 밝혀 이번 리우+20 회의의 성과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결국, 1992년 리우회의 이후 20년 동안 1인당 GDP는 40% 이상 증가한 반면, 인

구는 55억에서 70억으로 늘었고, 천연자원 이용은 4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은 35% 이상 증가했다면, 생물다양성은 30% 이상 감소해 온 현실에 눈을 감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한 지속가능한 미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음.

분야별 동향 4

정치·사회운동

●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 자치구와 군의회를 전면 폐지하고, 6개 광역시는 구청장을 직선제로 뽑던 것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대도시 자치제도 개편안을 의결함.
- 주요 내용은 서울시 경우 25개 구의 구청장은 민선을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고,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는 구청장(군수)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임.
- 또한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는 인구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담겨 있음.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 부산의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의 중구와 남구, 인천의 동구와 중구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음.
- 개편안을 추진하는 위원회는 자치구제 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구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 정부의 안대로 대도시 행정체제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국민의 46%가 거주하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담아낼 수 있는 기초단위의 정치, 행정적 통로가 사라지게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근래에 상업적 도시계획과 거주민 몰아내기식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구체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대도시의 기초 행정 단위를 통폐합하고 폐지하려는 이번 정부의 안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번 개편안은 올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고,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이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는 사회갈등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그해 6월의 석발기와 한국 사회운동

“1987년에는 석발기를 돌리는데 가게 앞으로 시위대가 지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같이 시위에 나가자는 전화도 자주 오고, (.....) 실은 나도 몇 번은 나갔습니다. (웃음) 그대로 여기서 저길로 계속 가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생각에 그냥 묵묵히 석발기를 돌렸어요. 그래서 그 석발기가 잊히지 않아요.”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 21쪽)

故박재일 회장님의 고백입니다. 알다시피 석발기(石拔機)는 쌀에 뒤섞인 돌이나 뉘를 고르는 기계입니다. 박재일 회장님은 지금으로부터 25년여 전 1987년 6월,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과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도 짐짓 모른 척 하루 종일 석발기를 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마의 쌀을 고르는 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그해 여름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비지땀을 흘리며 석발기를 돌렸을 지도 모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박재일 회장님과 한살림 일꾼들은 국민적인 민주항쟁의 폭풍 속에서도 쌀가게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물론 거기엔 농민과 농촌을 살리려는 애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시다만, 또 하나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길이 숨겨져 있었고 새로운 사상과 운동이념이 잉태되고 있었습시다.

밥 한 그릇의 혁명,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그동안 한국의 거의 모든 사회운동은 '정치'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4.19혁명과 유신반대운동과 80년 5월의 광주항쟁, 그리고 한살림이 문을 연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987년 6월의 민주항쟁도 결국 정치를 바꾸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독재를 타도하고, 직선제를 쟁취하고, 좋은 정당을 만들고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사실 지금도 주류 사회운동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정치로써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치열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삶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한살림 선배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세상을 바꾼다.” 한살림은 한국 사회운동사에서 생활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정치'를 통해 삶과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기도(수행)'를 통해 삶과 사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한살림은 '밥 한 그릇(생활)'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한 한국 최초의 사회운동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의 혁명'은 먹을거리를 통해 몸을 건강케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농민과 땅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밥(먹을거리)을 생산하는 가운데서 협동적 생산공동체를 복원하고 밥을 짓고 차리는 가운데 밥상공동체(생협)를 되살립니다. 밥 한 그릇을 바꾸어 몸과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생산양식과 노동양식의 변화를 꾀합니다. 나아가

핵발전소와 자동차 등 과학기술과 산업문명에 대한 다른 생각과 삶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문명의 전환.

‘영혼이 있는 직거래’로 통하다



밥은 차고마우신 하늘·땅입니다.

‘밥 한 그릇’은 운동전략 이상입니다. 세계와 삶에 대한 다른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사상이 그것입니다.

‘밥 한 그릇의 생명사상’의 비밀은 판화작가 이철수 님의 ‘밥 한 그릇’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철수 님의 밥 그릇의 밥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담긴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해와 달과 산과 들, 강과 바다를 비롯한 생명세계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생명의 밥 한 그릇 안에는 치명적인 독

극물인 농약과 화학비료, 착색제, 성장촉진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급기야 우리의 밥상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의 혁명’이 더욱 절실합니다).

밥 한 그릇을 통해서 ‘한살림’, 즉 공생의 이치를 알아차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마음이 만납니다. 농약중독으로 위태로운 농민의 생명, 생태계파괴로 신음하는 동식물들, 농약과 화학비료로 죽어가는 땅을 살려야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과 물과 공기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도농직거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살림의 직거래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정신,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성(spirituality)이 오늘 한살림의 알갱이일지도 모릅니다. 가히 ‘영혼이 있는 직거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비슷한 방식으로 도농직거래를 했던 ‘좋은쌀집’의 사례와 비교됩니다. 합리적 소비의 내면(內面) 생명의 아픔과 열망이 주부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실무자들의 헌신을 나애했고 생산자들의 농심(農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새만금, 촛불, 4대강, 용산, 강정마을 등 최근 몇 년 한국 사회운동의 주요 현장에 끝까지 함께한 것은 사회운동단체가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운동의 추동력이 ‘정치적 이념’에서 ‘영성’으로 사실상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절정기였던 1987년 6월 그해 여름, 서울 제기동의 허름한 쌀가게에서 한국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2호

발행일 2012년 5월 25일

발행인 박맹수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